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2018 주요업무 보고

2018. 3. 6.(화)

정 무 부 시 장 실

Ⅰ. 일 반 현 황

1 인력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15명 / 현원 14명

('18. 2월 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6급	7급 이하	5급 이상	6급	7급
정 원	15	2	2	9	2	-
현 원	14	1	2	9	2	-

2 예산현황

○ 업무추진비 : 197,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197,8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시정 협력 · 홍보 간담회비, 직원 격려 · 경조사비, 사회복지 후원금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 차, 소모품 등 구입

3 주요기능

○ 대 의회 ·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증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생 관련 협치 강화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시정성과 달성

□ 추진방향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시행관련 시의회와 협조체계 구축

- 의장단·당정협의회 및 상임위원회별 현안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강화
- 시정 주요사업 검토·대시민 발표 시 시의회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 및 소통

○ 시정운영 파트너로서 의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 지역별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모색
- 주요 행사 개최시 초청대상, 범위 등과 관련 의회와 사전 조율하여 추진

□ 추진계획

○ 정기적 간담회 및 당정 · 정책협의회 추진

-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등과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 공유 위한 간담회 개최
- 정당별 원내대표단 또는 당직자와 집행부간 정책 현안 논의의 장 마련

○ 위원회별, 지역별 현안공유를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 상임위원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무부시장 주재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의원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주요 민원사항 공유

○ 시의회와 주요정책 및 행사 사전 공유

- 기자설명회, 브리핑 등 보도자료 배포 전 실 · 본부 · 국장 책임 하에 사전설명

- 주요 행사 등 개최시 최소 7일전 지역 의원에게 경위 및 사업내용 설명·초청

2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추진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 추진방향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형 지방분권 과제 이행 지속 촉구

○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및 기준보조율 차별 시정 추진

○ 국정감사 등 시기별 對국회 대응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한 국회협력 강화

□ 추진계획

1 법률 · 제도개선 과제 입법 추진

○ 서울형 지방분권 과제 실행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협력 지속 건의

–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주재정권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주요과제 이행 촉구

○ 의제설정 단계부터 실행까지 우리시 의견 관철을 위한 협력체 구성 촉구

– 市-B.H·행안부·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정례적 정책협의 네트워크 신설 촉구

▸ 분권의제 선정부터 세부 실행전략 수립까지 공감대 형성 가능한 통로 마련

○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 정책위원회 의장 및 소관 상임위(법사, 정무, 행안, 산통, 환노위) 간사 의원에게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및 입법 필요성 설명

○ **임시국회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지속 건의**

- 본부·국별 개선과제 발굴, 소관 상임위 위원에 방문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2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해 실·본부·국 협력토록 하여 국비추가확보 역량 집중**

- '18년도 국비 추가 기확보 사업은 지속 반영되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력강화
- 국비확보 T/F 운영 및 사업별 전담 국회의원 매칭(서울지역 및 소관 상임위 등)

○ **시 핵심사업을 조기 선정하여 관계부처·기재부·국회 대상 설명 실시**

-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국비 반영 내역 모니터링 추진(5월말, 8월말)
-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시 시장단 및 소관 실·본부·국장 등 국회의원·보좌관 대상 방문 설명

※ 정부 예산편성 일정
: 정부예산(안) 편성(9.2일, 기재부 ▸ 국회), 정부예산 심의·확정(12.2일, 국회)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별 적용 시정 지속추진**

- 전체 국고 보조사업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안) 제시
- 지방분권 과제와 연계하여 관심 국회의원, 관련 부처 등에 지속 건의

3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및 소통강화

○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TF 운영**

- 주요 상임위(행안위·국토위 등) 의원 요청사항 관리 및 의원별 관심사항 파악
- 사전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배경파악 및 분석 실시, 요청자료 제공 등

○ **국회 협력 관계 상시 유지 및 의원 요구사항 처리 철저**

- 지역 국회의원·주요 상임위 보좌진 대상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로 시 현안 공유
- 주민 민원 및 국회의원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회신 철저

3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 및 소통다양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시행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집행부 및 유관 단체와의 의견 조정 등 실시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시행 전 현장감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실시**

○ **소통 채널의 확대·다양화를 통해 소외된 시민의 의견수렴 추진**

○ **올바른 시정정보의 제공을 위한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추진**

□ 추진계획

○ **정책 관련 당사자와의 사전 협력 및 소통 강화 면담 실시**

- 2018 주요 시책 시행 전 유관단체 및 기관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장기 미해결 시민 요청사항에 대한 부서 및 민원인 합동 조정회의 추진

○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정책관심도가 높은 대상시민 우선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 강화
- 새로운 유관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서울시정의 지지층으로 확보
- 시민 주도로 개최되는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교류층 확대

○ **언론기관과 소통으로 부적절한 보도 사전 대응 및 시정정보 제공 강화**

- 주요 이슈 발생시 기자간담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실시
- 시정철학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프레스투어 등 적극실시

참고 자료 1

우리시 중장기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안)

연번	분야	과 제 명	관련법률
1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경제민주화 기본법
2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	청년기본법
3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속성 확보 및 사업조정 근거 신설,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	경제활성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6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규제프리존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규제프리존 특별법
8	도시재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방식 동의기준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9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국토계획법
10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수청구 시 투자심사 대상 제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12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	주거안정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한 규정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14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기 지정	주택법 시행령
17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등 보조률 차별 개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법
19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20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2

지방분권 7대 핵심과제

①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의 자율적 조직권 확대로 책임행정 구현) - 3급 이상 기구 설치 등 조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권한 부여 → 책임부시장제 도입, 실·본부·국 기구 수 및 복수직급제 확대 등 우선 추진
②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 제정권 범위 확대)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제정범위 확대 →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자치권 명문화
③ **시민참여형 지방분권개헌** 자치입법권	○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 (개헌으로 시민참여형 분권국가 구현) -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시민참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④ **중앙의 통제권한 조정** 자치행정권	○ 중앙의 통제권한 조정 (중앙의 불합리한 통제권한 폐지) → 청년수당 직권취소 등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의 일방적 시정명령·직권취소 권한 및 복리사무에 대한 의무협의제도 폐지
⑤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자치행정권	○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사무배분 체계의 양적·질적 확대 개선) -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촉구 → '12년 이양확정 후, 미이양 사무의 일괄이양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⑥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재정권	○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재원 확보) -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단계별 지방이양 → 기초복지사업 등의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적용 개선
⑦ **시행령 · 규칙 개정** 자치행정권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적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우선 추진) - 행정기구 설치권한 확대, 국비지원 강화,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 개선

별 첨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운영위원회)

정무부시장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	1	5	-	-
	시정·처리요구사항	4	1	3	-	-
	건 의 사 항	2	-	2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업무추진비 집행률 저조는 개별 시의원 또는 의장단과의 면담 등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무부시장실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기 바람. **(정무부시장실)**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시의회 지도부(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대표의원2) 및 개별 의원님에게 사전 협의 및 현안 설명하여 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함 - '17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 간담회 : 총28회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5회, 교섭단체별 협의회 10회, 상임위원회 13회 - 지역 민원,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의원님께 설명 및 사전 협의 : 수시 □ **향후계획** ○ 시장 및 부시장 면담결과 피드백 철저, 지역행사 시의원 참석 및 사전 안내 : 상시 ○ 시정 주요사업 검토·대시민 발표 시 의회와 사전 공유 및 협의 : 상시
○ 정무부시장실 성과지표 중 '정무보좌기능 강화' 항목의 목표치가 과도하게 낮은 바, 현실화하기 바람. **(정무부시장실)**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의회, 국회, 정당 등과의 의견 조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건수를 늘리는 등 해당 분야별로 적극 소통, 협력하는 중임 - 시의회, 국회, 시민단체 등 협의, 조정 간담회 : 총 83건 → 목표치(67건) 초과 □ **향후계획** ○ '18년 정무보좌기능 강화(시의회,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 협의 조정)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별 간담회 목표치를 높이고 협의 조정 실적을 향상시킬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민여론을 청취하고자 시작된 청책토론회와 시민여론조사가 매년 감소 추세이고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청책토론회> ○ 그간 '11.11월 도입된 청책토론회 운영 활성화로 '17년 이후 정책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등 실·본부·국 주관의 토론회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음 - '17년 11회 개최, 총 6,640명 참여(부시장이상 참석 기준) ○ 청책토론회 자체 홈페이지의 콘텐츠(개최현황, 시민제안의견 등)를 업데이트하여 시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행정>시민소통)로 통합·이관하여 운영 중임('17.11.~) <여론조사> ○ 시정여론조사는 '15년 48건, '16년 42건, '17년 44건 등 매년 4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산이 소요되는 외주조사 외에도 비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청책토론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 '18년 시정여론조사 40건 내외 실시 예정
○ 2018년 예산안에 보조금 미지원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복지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총 99개소 중 총 98개소 지원** ○ 지원현황 : 총 98개소 - 운영지원 : 96개소 (2개소 정수지원에 포함) - 특별지원 : 2개소 .시 정수기준(인건비.운영비지원) 마련이후 구립(중구) 설치 시설로 사업비 일부지원 ※ 미지원 : 1개소 (법인 내부사정으로 운영중단, 폐쇄예정) □ **향후계획** ○ '18년 분기별 예산 지원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민선 6기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실적이 저조한데, 정무부시장실에서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분권 관련 법령·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바람. **(정무부시장실)**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7년도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협력실적은 행정사무감사 건의(국회와 협력실적 저조) 이후 3건을 추가로 개정발의하여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방법 확대 건 등 3건 ○ 자치재원,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법령, 제도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 및 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국회에 지속 건의하였음 □ **향후계획** ○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 적극 추진(상시)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분권 과제를 국회에 지속 건의(상시)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 등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10.11.) - 지하철 시설 7개분야 21개 주요시설 개량 추진 ※ 총사업비 1조3,552억원(기투자 8,626억원) ○ 국비지원 지속 요청('13.5.~) -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18년에 처음으로 383억원 국비 확보 ○ 노후시설 투자비 공사채 발행 행안부 승인 - 노후전동차 구매 등 40개 사업 등 4,450억원 □ **향후계획**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지속 추진(~'20.) - 투자 우선순위 검토를 통한 중장기적인 선택과 집중의 재원투자 실시(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시설 위주 투자) ○ 국비지원 요청 지속 추진 : '18년 국비 383억원 확보 - '19년 국비 요청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자료 준비 등 ○ 노후시설 투자비 공사채 발행 : 4,450억원